

협치 사라진 21대 첫 정기국회, 필리버스터로 막 내려

‘우분투 협치’ 기대됐지만 與 공수처법 강행으로 극한 대처 코로나 추경·예산안 합의 처리는 성과... 민생법안 뒷전 비판

21대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협치를 다짐한 국회는 역대 최대인 558조원의 예산안을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 처리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고, 결국 거대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막을 내리며 오점을 남기게 됐다.

권력기관 개혁 논란에 함몰돼 정작 중대기업에 해차법과 같은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 ‘우분투’로 시작한 정기국회...공수처법 대립으로 또 협치 실종= 이번 정기국회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입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됐다. 이낙연 대표는 같은 달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의미의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우분투’를 언급해 협치 기대감도 높였다. 일단 여야의 협치는 예산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역대 최단기간 내 처리됐다.

하지만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는 이러한 협치 분위기를 금세 얼어붙게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4차례 열어 후보를 도출하고자 했으나 야당의 거부권으로 끝내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야당이 필리버스터와 정권 퇴진 구호로 대응하면서 협박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 또다시 뒷전으로 밀린 민생법안...공정3법은 여당 내에서도 비판=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 400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대안 반영까지 합하면 총 129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 관계자는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을 뒤로 미루고 미쟁점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 수는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를 둘러싼 갈등 속에 정작 민생 법안은 외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법의 첫 문턱인 법안소위도 여당의 중점법안이 걸린 상임위에 집중됐다. 총 28개 법안소위가 정기회 100일간 평균 4.5회 열렸지만 법사위(8회), 행안위(1소위 13회·2소위 7회), 정보위(7회) 등에서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 복지위(1소위 3회·2소위 2회), 과방위(정보통신방송소위 3회·과학기술원자력소위 4회), 산자위(중소벤처기업소위 4회·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4회), 교육위(4회) 등 중점 법안이 없는 곳은 법안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맨 오른쪽)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반대 시위를 하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못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를 지

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필수노동자보호법 등은 본회의에 부의되지도 못했다. 대표적인 개혁 법안인 공정경제 3법을 두고서는 “입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여당 내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위, 윤석열 기피신청 모두 기각...심재철은 스스로 빠져

증인 신청 받아들일 지 여부 논의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10일 기각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날 오후 내부 논의 끝에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기피 신청했다.

이 차관은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惡手)라는 평가를 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

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를 낳았다.

심 검찰국장은 법무부 내에서 추미에 장관의 ‘오른팔’로 꼽히고 있다. 외부 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다.

특히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는 지난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 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란에우리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비판한 인물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은 뒤 특별변호인들을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비

공개로 기피 여부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결국 이 차관과 외부 위원 2명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징계위는 윤 총장 사건 심의에 참여할 위원 구성이 확정된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총 7명을 징계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앞서 밝혔다. /연합뉴스

혁신 보수 이미지 노렸나...야권 잠룡들 ‘김종인 사과’ 지지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강행하겠다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야권 잠룡들이 잇달아 지지를 보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현재 국회 상황이 어지럽기 때문에 사과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다”면서도 “시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과 의사를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시거나 당내 의견 수렴이라는 과정의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사과 여부라든지 사과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호응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전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모두 괴로운 선택을 했다. 이제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화해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며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우회적으로 김 위원장의 사과를 지지했다. /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우리는 탄핵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다. 사과와 반성이 늦었다”며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 국민께 용서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사죄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야권의 유력 주자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김 위원장의 결단에 공감하고 나선 배경에는 ‘혁신적 중도 보수’ 이미지를 노린 전략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차기 대선 출마를 물밑 준비하는 잠룡들이 당 세인의 선봉장인 김 위원장과 주파수를 맞춰 중도층 지지를 흡수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공수처 국민과의 약속...새해 출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에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주철현, 국민 생명 보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10일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의 제도개선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이고,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약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 화학물질이 농약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 과정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개정법률안에 농약 원제업 또는 수입업자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 시설, 장비, 인력을 보다 강화해 현행 등록에서 허가를 받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규제강화에 따라 다소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듣듯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 문흥본점 266-4150
- 양산지점 573-4150
- 운암지점 528-4150
- 매곡지점 572-4150
- 첨단지점 576-4150
- 운암산지점 513-4150
- 동광주지점 264-4150